

민주당 일당독점에 막나는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경선 후보 간 '사전 밀어주기 약속' 내부 투표로 후보 선출한 뒤 본회의 '거수기' 전략시커

더불어민주당이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시의회 본회의를 거수기로 전략시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할 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속 시의원들 내부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 일부 후보 간 '사전 밀어주기 약속'에 따라 1차 투표에서 4표를 얻은 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두 배 이상 많은 표를 받은 1위 후보를 꺾고 의장 후보로 선출된 과정을 두고도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맞말이 부상하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모여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경선 투표를 한 결과 신수정(북구3)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강수훈 의원 8표, 신수정·심철의 의원이 각각 4표를 받았다. 이에 과반 투표자가 없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했고, 출생 연도는 같지만 생일이 빠른 신 의원이 연장자로 2차 투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서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던 강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이 '결선 투표 단일화'를 약속한 상태에서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신 의원이 11대 10으로 한 표차 승리를 거두게 돼 최종 의장 후보로 뽑혔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사실상 이날 후반기 의장 투표가 마무리됐고 정작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투표에 앞서 지난달 19일 광주시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한 의원이 후반기 의장, 의회직 후보로 등록할 시 정계 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는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정하고, 다른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에 광주시의회 내 국민의힘 의원 1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있는데도 민주당 자체적으로 의장 후보를 정리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선출하더라도 의석 수가 21명인 만큼 민주당 후보가 선출될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에 소수 정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본회의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면 소수 정당에서도 충분히 의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은 "의장을 뽑는 것은 당을 떠나 의회와 의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함께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투표할 때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단까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도 "당내 경선"은 다른 당 후보와의 본선 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것인데, 다른 당 후보가 출마 입장을 표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것은 일당 독점의 폐해"라며 "이번 경선에서 밝힌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가 의장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민주당 내 경선은 지방자치 훼손의 예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9일 시의회 상임위 위원장 후보도 각각 투표로 통해 선출했지만 이 과정에 일부 상임위 위원장 후보에 대한 반대가 7표에 달해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친 강기정' 신수정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친 강기정 시장' 인사로 꼽히는 신수정(북구3·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시당에서 비공개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경선 투표를 해 신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시절, 정치에 입문해 강 시장의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3번, 시의원에 2번 당선돼 대표적 '친 강' 인사로 꼽힌다.

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는 5명이 출마했으며 결선 끝에 재선인 신 의원이 초선인 강수훈(서구1) 의원을 꺾고 선출됐다. 의장 경선에는 재선 박미정(동구2)·신수정·심철의(서구4) 의원과 초선인 강수훈·박수기(광산구5) 등 5명이 출마했다.

제1부위원장에는 서용규(비례) 의원이 흥기열(동



구1) 의원을 누르고 후보가 됐고, 제2부위원장은 채은지(비례) 의원이 서임석(남구1)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뽑혔다. 상임위원장 후보는 모두 1명씩 등록해 찬반 투표 후 확정됐다. 운영위원장에 정다은(북구2)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에 안평환(북구1)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에 최지현(광산구1)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박필순(광산구3) 의원, 교육문화위원장에 명진(서구2) 의원이 후보로 나선다.

광주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이날 후보 확정인 본선이나 다름없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3월까지 의장단 후보자 신청을 받고 같은달 8일 의장 선거를 치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



"기름값 지금이 가장 싸다"... 주유소에 줄이은 차량들

유류세 인하율 축소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의 한 주유소가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이날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장, 전남·전북 지사 7년 만에 만난다

4일 전북서 '호남권 정책협의회' 초광역경제권 개발방안 논의 주목

광주와 전남·전북도 시장·지사가 무려 7년 만에 다시 만난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한 호남권 초광역경제권 개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는 4일 오전 전북 정읍시 JB 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연다.

광주시장과 전남·북 지사의 만남은 지난 2017년 3월 나주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와 시장·지사 간 일정 등으로 만남이 연기되거나 미뤄졌다가 열리는 만큼 다양한 호남권 개발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시장·지사 간 만남에서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난 27일 전북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들 사·도는 4일 시장·지사 간 만남에 앞서 실무협의회를 재차 열고 세부 안건과 협의 내용 등

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획기적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할 때라는 점,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앙 권한 이양, 광주·전남·전북 등 사·도 간 경계를 초월하는 호남권 대형사업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7년 만에 이뤄지는 호남권 시장·지사들의 만남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현안을 발굴,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요구' 청원 동의 70만명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홈페이지 온라인 청원에 7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30일 낮 12시 기준 70만명 이상이 넘게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사이트는 이날 현재 접수 대기인원이 1만명을 넘어서고 대기 시간만 약 2시간에 달하는 등 접수 지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

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